

與, 언론중재법 '30일 처리' 재확인에 우려 목소리

윤호중 "전원위 소집 수정 논의"

당 일부 "여야 합의 필요하다"

야권 필리버스터 결사항전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내부에서 반대와 우려 표출이 잇따르면서 아쉬운 분위기를 보였다. 야권에서는 결사항전 태세를 다지고 있어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며 30일 본회의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을 언급하며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도 그에 맞게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법안을 잘 설명할 기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일단 이번엔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우려를 반영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친분 의원은 통화에서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당장은 득보다 실이 크지만 압도적 의석을 갖고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선(先)처리, 후(後)보완입법론이 당내 압도적 다수의 기류라고 보면 된다"며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개혁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후폭풍이 더 거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진과 비주류를 중심으로 반대 또는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어 강행처리 방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SNS에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야

당과 시민·언론단체에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이 전날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의 부활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한데 이어 친문으로 분류되는 오기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잇따라 신중론을 편 바 있다.

한 비주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재보선에 서 독선·독주론 때문에 패배한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속의를 거쳐서 정국국회 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다들 당의 눈치를 보며 말하지 않고 있지 않겠나"며 "현재 같은 방식이 맞나 확신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일단 미뤄졌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인 만큼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면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기자 출신인 정진석·김은혜·박대출 의원은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독재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상황으로 불리는 이해관계가 여러 차례 공개 언급됐듯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좌파 20년 장기 집권"이라며 "장기 집권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국민의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쟁점 중 하나인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처벌은 죄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 휴지를 버렸다고 손목을 자를 수는 없다. 과속했다고 구속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처벌은 처벌 받는 사람들의 합리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박광온



민주 워크숍, 대선주자 총출동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대선 경선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대표, 박용진,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윤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책위의장 등 여권의 기자 출신 의원들을 호명하며 "열 명이 넘는, 한때 언론인이었던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께 여쭙고 싶다"며 "9개월 뒤 퇴직할 현재 권력에 방탄막 씌워주는 언론 봉쇄에 왜 함께하시려 하나"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뇌송송 구명타, 미군 잠수함 총출동, 7시간 밀회설, 전자와 튀김 참외, 청와대 국판 등 세상을 뒤흔든 5대 가짜뉴스를 만든 공장은 여권발 아닌가"라며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언론중재법은 자폭 테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26%·윤석열 20%·이낙연 9%

4개기관 대선 적합도 조사

호남 이재명 37%·이낙연 23%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양강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글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8월 넷째주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26%, 윤석열 전 총장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재명 지사 54%, 이낙연 전 대표 21%로 격차가 벌어졌다. 호남에선 이재명 37%, 이낙연 2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석열 전 총장 54%, 홍준표 의원 13% 순이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지사 40%, 윤석열 전 총장 34%였다. '이낙연 대 윤석열' 양자대결에선 이낙연 전 대표 32%, 윤석열 전 총장 3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21.7%)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

윤석열 26.5%·이재명 24.9%...1%차 접전

리얼미터 조사...이낙연 12.8%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차이의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021년 8월 4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지난 8월 2주차 조사 대비 0.2% 상승한 26.5%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1.0%포인트 하락한 24.9%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2.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

원은 2.7%포인트 상승한 8.1%로 최재형 감사원을 제외하고 4위로 올라섰다. 가상대결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경우 윤 전 총장은 42.5%, 이 지사는 36.3%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6.2%포인트 앞섰다. 8%포인트 앞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3만8589명에게 접촉, 최종 2015명이 응답(응답률 5.2%)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전화결합(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

“국민피해 구제법”...민주 대선주자 언론중재법 입장 차이

이재명 “지켜보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 일제히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제가 의원도 아닌데...지켜보는 입장이나 잘 모르죠. 원내 일이나 원내에서 하겠조"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는 아니지 않느냐.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국민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근거가 없거나 취재를 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 법정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개혁법이 (법사위 처리로) 큰 고비를 넘었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안 되지 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는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자가 아닌 언론사에 책

임을 묻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제외해 독소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며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러나 합의될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세계 일류인데 국민 신뢰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방책이 없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 취지에 공감한다. 제4의 권력이라 지칭되는 언론이 책임을 잘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목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목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